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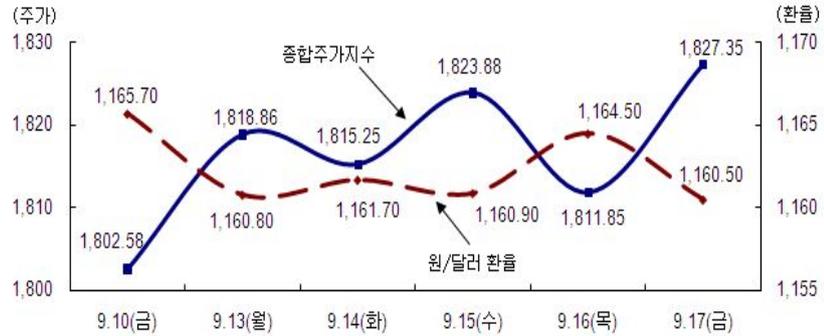
10-35(통권 415호)
2010.9.17



- 동서독 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 통일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한
긍정적 통일 인식 확산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10~9.17)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1
 - 동서독 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 통일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한 긍정적 통일 인식 확산 1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이 해 정 선임 연구원 (2072-6222,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동서독 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 통일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한 긍정적 통일 인식 확산

1. 동서독 통일의 위상 변화

동서독은 1949년 분단된 지 40년 만인 1990년 10월 3일 통일되어, 통일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독일은 2009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4 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3 위의 상품 수출입국으로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서독 통일의 내적 요인으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강력한 경제력에 기반한 서독의 주도적 통일 노력을 들 수 있다. 특히, 1982년 정권 교체에 따라 여당이 된 기민당은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통일의 외적 요인으로는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로 동서 냉전 구조 해체라는 외부 요인에 서독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을 들 수 있다.

2. 동서독 통일의 성과와 한계

(성과) 동서독 통일의 성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동서독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달성을 들 수 있다. 통일을 전후하여 조속한 방식과 신중한 방식에 대해 국민 여론이 양분되었으나, 결국 동독 주민들은 자유총선거에 의해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어 신속하게 통일이 진행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둘째, 국제사회 위상 제고를 들 수 있다. 통일 이후 직접적 안보 위협 소멸에 따라 유럽통합의 완성 등 다자 외교에 역점을 둔 대외 정책을 실행하고, 해외 파병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 내 안보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UN에서도 정규 예산 및 각종 평화 유지 활동 사업 등에 대한 자발적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이은 3위 (8.7%)의 UN재정 기여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 회복을 들 수 있다. 통일 직후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서독의 43%, 생산성은 서독의 45% 수준이었으나, 2008년 현재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71%까지 회복되었으며, 생산성 역시 79%까지 향상되었다.

(한계) 하지만 통일 독일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동독 주민들의 소외감을 들 수 있다.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급진적 흡수 통일은 생활 수준의 불균형 등 동독 주민들을 소외로 이끄는 상황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동독 주민들에게 동 국민이라는 상실감과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를 의미하는 '오스탈기(Ostalgi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동서독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들 수 있다. 적정교환비율인 4.4:1을 무시하고 1:1의 화폐통합을 추진하였고, 신탁청이 사유화 실적에 치중하여 기업가치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없이 구매자 선정을 남발하여 동서독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동서독간 실업률 격차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사유화 진행 결과 대기업들의 서독 지역 집중 현상으로 구동독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독 지역 인구의 서독으로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국가 부채 누적 등 높은 재정 부담을 들 수 있다. 통일 당시 동독 지역 재건 비용을 과소평가하여, 이후 막대한 재건 비용 조달로 세금 인상·재정 적자 확대 등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통일비용으로 매년 독일 GDP의 1.5% 수준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GDP의 4% 가량이 지출되었다.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사점

동서독 통일 과정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통일 편익이 막대함을 인식하고, 통일 비용 부담에 의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 충분한 통일 논의를 통한 통일 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 부담 완화 및 북한 주민들과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남북한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재원 조달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외감 완화를 위하여 탈북자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에 대비한 사회적 갈등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 동서독 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

- 통일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한 긍정적 통일 인식 확산

동서독 통일의 위상 변화

- 동서독은 1949년 분단 40년 만인 1990년 10월 3일 통일되어 통일 20주년을 맞게 됨
- 독일은 2009년 현재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3위의 상품 수출입국
- 통일의 내적 요인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강력한 경제력에 기반한 서독의 주도적 통일노력, 외적 요인은 소련 및 동구권 변화로 동서 냉전구조 해체라는 외부 요인에 서독 정부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한 것임

동서독 통일의 성과와 한계

성 과	동서독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독 기본법 제23조(동독의 연방 가입)와 제146조(통일 헌법 제정)에 의한 통일 방식에 대한 양분된 여론을 자유 총선거를 통해 제23조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하여 통일 추진
	국제사회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통합 등 다자외교에 역점을 둔 대외 정책 추진 - 해외 파병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 내 안보 공여국 지위 확보 - UN 재정 기여도 3위(8.7%) 유지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직후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서독의 43%, 생산성 45% 수준이었으나, 2008년 현재 동독 지역 1인당 국민소득 서독의 71%까지 회복, 생산성도 79%까지 향상
한 계	동독 주민들의 소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진적 흡수 통일 방식으로 동독 주민들의 소외를 초래하여, 2등 국민이라는 상실감과 패배감 유발 - 동독 시절의 향수를 의미하는 '오스탈기' 현상 발생
	동서독 지역의 불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간 실업률 격차 : 서독 지역 6~8%, 동독 지역 10~20% 수준 - 대기업들의 서독 집중 : 급격한 사유화의 부작용 - 동독 지역 인구의 급격한 서독 유출 : 1991~2005년간 서독 지역 인구가 4% 가량 증가한 반면, 동독 지역은 10% 이상 감소
	국가 부채 누적 등 높은 재정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비용은 독일 정부의 당초 연간 GDP의 1.5%수준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GDP의 4%가 지출 - 막대한 재건 비용 조달로 재정 적자 확대 등 후유증 지속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사점

- 통일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한 부정적 인식 차단 필요
-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공감대 형성
- 충분한 통일 논의를 통해 통일 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재정 부담 완화 및 북한 주민들과의 위화감 해소를 위한 한반도 균형 발전 전략 수립
- 통일 재원 마련 및 비용 최소화 방안 모색
- 탈북자 적응 프로그램 등 통일 이후 사회 통합에 대비한 사회적 갈등 완화 노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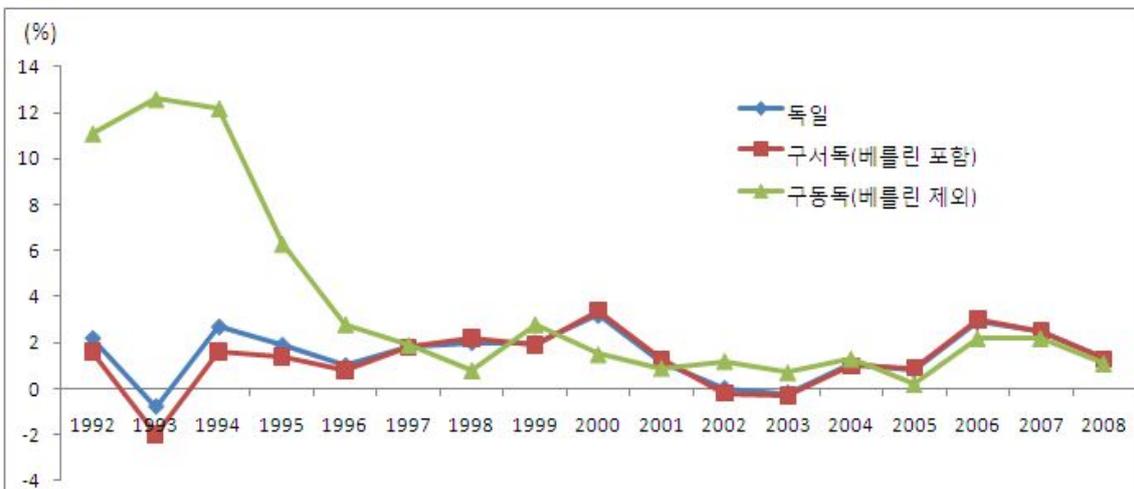
1. 동서독 통일의 현황

(1) 현황

○ 동서독은 1949년 분단된 지 40년 만인 1990년 통일되어, 통일 20주년을 맞게 되었음

- 경제 규모 및 위상 : 독일은 2009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3위의 상품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¹⁾
- 독일의 실질경제성장률도 2003년 -0.2%를 기록하고, 2004년 1.1%의 플러스 성장 이후 2008년 1.3%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동서독 실질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



자료 : 국가정보원,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 2009. p. 69 및 한국수출입은행, 『2009 독일통일백서』, 2009. p. 198 참조.

- 통일 직후 동독 주민의 생활 수준은 서독의 42.9%, 생산성은 서독의 44.5% 수준이었으나, 2008년 현재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동독의 71%까지 회복되었으며, 생산성 역시 79%까지 향상되었음

1) CIA, The World Factbook, 2010.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m.html> 참조.

< 통일 후 동서독 경제력 비교 >

	서독(A)		동독(B)		B/A(%)	
	1991	2008	1991	2008	1991	2008
GDP(10억 유로)	1,364.0	2,144.9	170.6	377.1	12.5	17.6
1인당 GDP(유로)	22,030	32,231	9,442	22,840	42.9	70.9
취업자 1인당 GDP 생산량(유로)	45,235	64,273	20,150	50,786	44.5	79.0
노동자 수입	21,763	28,727	12,676	23,408	58.2	81.5
인구수(천 명)	61,914	65,618	18,071	16,509	29.2	25.2
실업자(천 명)	1,594	2,145	1,023	1,123	64.2	52.4
실업률(%)	5.2	6.0	10.9	13.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9 독일통일백서』, 2009. 및 OECD, *OECD ECONOMIC SURVEYS : GERMANY*, 2010. p. 25 참조.

(2) 통합 과정

○ (분단 과정)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나치정권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독일 제국 붕괴

- 1944년 9월 미·영·불·소의 베를린 분할 관리 결정과 1945년 2월 미·영·소 알타회담에서 독일 분할 점령 합의

- 1949년 5월 서독 건국, 1949년 10월 동독 건국으로 독일 내 두 개 정부 수립

○ (서독의 통일 정책) 서독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초반 동독 고립 정책을 수정하여 실용적 교류·협력 확대 정책으로 접촉면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통해 통일 달성

- 아데나워의 친서방 정책(1949~1963) :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서방공동체에 참여하여 독일의 주권을 재획득하는 전략

· 이에 1954년 10월 23일 서방 9개국과 「파리협정」을 체결하여 주권 회복

· 1955년에는 유럽공동체(EC)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

- 서독만이 전 독일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이며,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소련 제외)와는 국교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철저히 고수
- **브란트의 동방 정책(1969~1974)** :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접근을 통한 변화' 원칙에 입각하여 동독뿐 아니라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
 - 그 결과 동독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1972년에는 양독간 상호 통행을 허용한 「통행조약」 과 상호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한 「기본조약」 체결
- **슈미트의 현실주의 정책(1974~1982)** : 대미·대소 외교에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서독 외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동서독간 실질적 교류 협력 증대에 역점을 두는 실용적 통일정책 추구
- **콜의 통일 완성(1982~1990)** : 교류와 접촉 확대를 통한 통일 실현
 - 동서독간 우편과 전화·통신 개선, 서 베를린과 서독을 잇는 동독 내 고속도로 통행 개선 및 상호 인적교류 개선 등의 인도주의적 양보를 전제로 경제 원조 제공 등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여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 1989년 11월 28일 '10개항 프로그램' 제시,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 **(동독의 통일 정책) 동독은 초반 전동독의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던 시기를 지나 「1민족 2국가론」 → 「2민족 2국가론」으로 통일 정책을 수정**
 - 동독은 분단 초기 전독일을 대표하는 단독대표권과 정통성을 주장하였으나, 1955년 5월 14일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을 계기로 사실상의 「1민족 2국가론」을 주장을 확실히 함
 - 1969년 서독이 동독의 2국가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자, 동독은 「2민족 2국가론」을 주장
 - 호네커는 동독에는 '사회주의적 민족'이 서독에는 '자본주의적 민족'이 존재한다는 2민족 이론을 주장

- 그러나 동독이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한 경제계획이 실패하여 서독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자 호네커는 1981년 슈미트와의 정상회담에 응하기도 하고, 1986년 서독과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기존 입장을 철회

○ **동서독 통일 과정** : 동독 정부의 제한적 개혁·개방 → 동독주민의 전면적 개혁·개방 요구 → 동독 정부의 보수 회귀 → 소요사태 발생 → 동독 주민의 대량 탈출 → 베를린 장벽 붕괴 → 동독 정권 붕괴 → 자유 총선거 실시 → 2+4협상 → 독일 통일

-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양독간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동독 주민들의 체제 저항 의식 형성

- 1970년대 말부터 오일쇼크로 동독 경제난이 심화되자 동독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 증폭

- 1985년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적극적 개혁·개방 정책으로 동구권 위성국가들의 독자노선 허용과 개혁이 촉구되자 동구권 정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

- 1989년 5월 동독공산당이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를 조작한 사건을 계기로 개신교 세력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 촉발

- 동독공산당 내 강경파와 개혁파간의 격렬한 대립 끝에 1989년 10월 ‘호네커가 사임하고, 그의 추종자인 보수 성향의 ‘크렌츠가 당과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 취임

- ‘크렌츠’가 추진한 사회주의적 통제에 기초한 부분적 개혁 조치는 동독 주민들의 불신만을 초래

- 자유선거와 베를린 장벽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었으며, 1989년 11월 ‘신여행법’ 공포로 서독으로 출국이 가능해지자 동독주민들이 동서독 경계선으로 쇄도하여, 결국 베를린 장벽 붕괴(11. 9)

-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중도개혁 성향의 ‘모드로우’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권이 출범(1989. 11)하여,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거 실시

- 미·영·불·소 등 전승 4개국은 통일 독일의 군사적 위상 설정 등 대외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독 정부가 참여하는 2+4회담을 제안(90. 2. 13)
- 1990년 10월 1일 4개 전승국이 동서독에 관한 권리와 책임 중지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통일독일은 대외적으로 완전한 주권 국가의 지위를 회복

< 동서독 통일 일지 >

일시	내용
1945. 5. 7 - 9	- 독일 무조건 항복
1949. 5. 23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공포 : 서독 건국
1949. 10. 7	-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공포 : 동독 건국
1951. 9. 20	- 베를린 협정 : 내독교역은 내부거래로 간주하여 관세 면제
1955. 12	- 서독,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할슈타인' 원칙 발표
1961. 8. 13	- 동독, 베를린 장벽 구축
1967. 1. 30	- 서독, 루마니아 국교 수립 : 할슈타인 원칙 포기
1969. 10. 28	- 서독, 빌리브란트 수상 신 동방정책 발표 : 동독 실체 인정
1970. 3. 19 / 5. 21	- 동서독, 1·2차 정상회담
1972. 12. 21	- 동서독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 체결
1973. 9. 18	- 동서독 UN 동시 가입
1984. 7. 25	- 서독, 동독에 9억 5천만 마르크 차관 제공
1989. 11. 9	- 베를린 장벽 붕괴
1990. 3. 18	- 자유 총선거 실시
1990. 9. 12	- 2+4 협상
1990. 10. 3	- 독일 통일

자료 : 손기웅,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p. 6~17 참조.

2. 동서독 통일의 배경

○ (통일의 내적 요인)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강력한 경제력에 기반한 서독의 주도적 통일 노력이 효과를 거둠

- **국내 정치 안정** : 서독의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국내정치적 역량이 통일 여건 조성의 기초가 되었음
 -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서독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 독일 문제가 국제정치적 문제라는 것과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분단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최선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이는 1982년 정권 교체에 따라 여당이 된 기민당이 「기본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음

- **강력한 경제력** : 서독의 통일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서독이 단기간 내 이룩한 강력한 경제력의 활용임²⁾
 - (동독에 대한 경제적 우위) 분단 이후에도 동서독간 교류가 중단되지 않았던 이유는 서독이 경제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기 때문
 - 서독은 동독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차관과 원조를 제공함은 물론, 인도적 명분하에 1963년부터 1989년까지 동독의 정치범 약 33,700명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총 34억 마르크의 대가를 동독에 지불³⁾

2) 1988년 서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39 달러로 19,813 달러를 기록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서독의 금과 외환보유고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 한편, 서독의 국내총생산은 동독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었음. 안두순, 『한반도 통일과 경제통합』, 한국경제신문사, 1993. pp. 71~74 참조.

3) 주독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통일』, 1992. p. 124 참조.

< 통일 이전 동서독 경제력 비교(1989년 기준) >

내용		서독(A)	동독(B)	B/A(%)
인구(천 명)		62,063	16,614	26.8
면적(km ²)		248,252	108,588	43.7
인구밀도(인/km ²)		250	153	61.2
전체취업자수(만 명)		2,774.2	888.6	32.0
고용구조	1차 산업 비율(%)	3.9	10.8	
	2차 산업 비율(%)	39.7	50.4	
	3차 산업 비율(%)	56.4	38.8	
1인당 GDP(달러)		19,283	5,840	30.3
1인당 주거면적(m ²)		36	28	77.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축된 주택비율(%)		70	35	
가구소비재 수준	전화보유비율(%)	99	17	
	자동차보유비율(%)	96	54	
	TV보유비율(%)	99	96	
국토면적당 총도로연장(km/1,000km ²)		698.8	437.0	62.5
국토면적당 총철도연장(km/1,000km ²)		255.8	229.7	89.8
전철화율(%)		42	25	

자료 : 국가정보원,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 2009. p. 5

- (국제 정치적 입지 강화) 서독은 서유럽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경제적 대가를 지불, EC에 대한 서독의 경제적 기여는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것으로 서독은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
-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하여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간주되면서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경제 지원을 빌미로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도출

○ (통일의 외적 요인)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로 동서 냉전구조 해체라는 외부적 요인에 서독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 냉전 해체의 국제정치 질서 :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등장으로 개방과 개혁 정책을 의미하는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가 추진되면서 동유럽 전역에 정치적·경제적 자유화 경향이 확산
- 1989년 민주화 물결이 확산되면서 동독 주민들이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헝가리로 불법 탈출을 시도
-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자 서독의 콜 수상은 소련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하여 통일 외교를 달성

3. 동서독 통일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① 동서독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달성

- 통일 전후 통일 방식에 대해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의 연방가입 방식과 제146조에 의한 통일헌법 제정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양분되었으나, 결국 동독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제23조에 의한 방식으로 통일 달성⁴⁾
- 서독 기민당과 콜 총리의 후원을 받은 동독 기민당 중심의 독일동맹은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조속한 통일을 주장
 - 서독 기본법 23조에서는 “기본법은 우선 서독 지역에 유효하고 독일의 다른 부분(동독)에서는 편입 이후에 발효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서독 기본법이 모범적인 민주헌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필요 없이, 조속히 통일을 실현시키고, 즉각적인 화폐통합 실시로 동독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서독 사민당의 후원을 받은 동독 사민당은 서독 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단계적이고 신중한 통일론을 주장
 - 서독 기본법 제146조에서는 “기본법의 효력은 독일 민족의 자결권 행사에 의한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상실한다”고 규정
 - 따라서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헌법을 제정한 후 헌법에 따라 통일 정부를 구성하며, 화폐통합도 동서독 주민간의 사회적 갈등과 분배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실시할 것을 주장
- 1990년 3월 자유총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은 기민당 중심의 독일 동맹을 선택함으로써 독일 통일은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

4) 김영윤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2009. p.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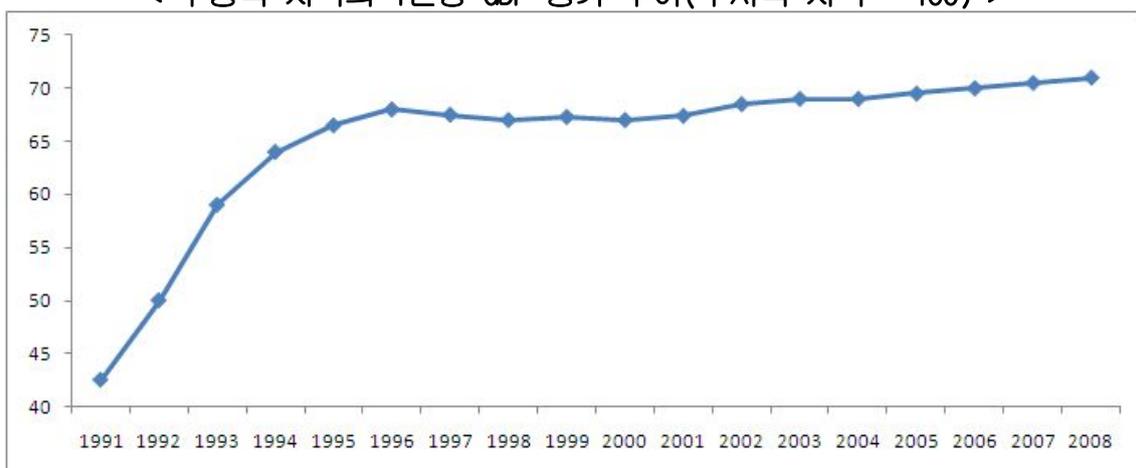
② 통일 달성에 따른 국제사회 위상 제고

- 통일 이후 직접적인 위협 요인 소멸에 따라 유럽통합의 완성 등 다자외교에 역점을 둔 대외정책을 실행
 - 통일 이전 “방위 목적 이외의 연방군 출동은 기본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는 기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NATO 역외 파병을 불허하였으나, 1994년 유고 파병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계기로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 마련
 - 이후 전범국의 굴레를 벗어나 해외 파병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내 안보 공여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 UN에서도 정규 예산 및 각종 평화 유지 활동 사업 등에 대한 자발적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이은 3위(8.7%)의 UN 재정기여도를 유지하고 있음⁵⁾

③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 회복(서독의 71%)

- 2008년 현재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71%까지 회복되었으며, 임금 수준도 서독 지역의 78%까지 향상되었음
- 1991년 동독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43% 수준이었으나, 1997년 69% 수준에 도달, 2002년에는 70%에서 2008년 71% 수준을 보임

<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 증가 추이(구서독 지역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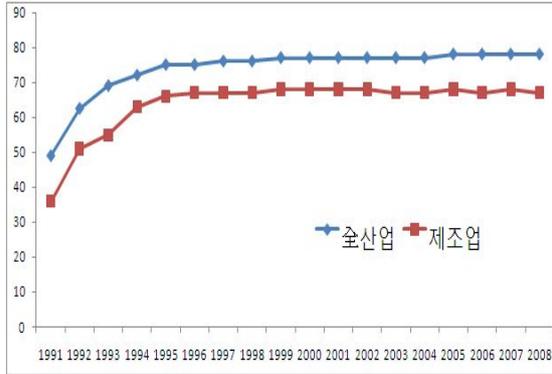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9 독일통일백서』, 2009. p. 7 참조.

5) 평화문제연구소,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 독일통일 바로알기』, 2009. p. 5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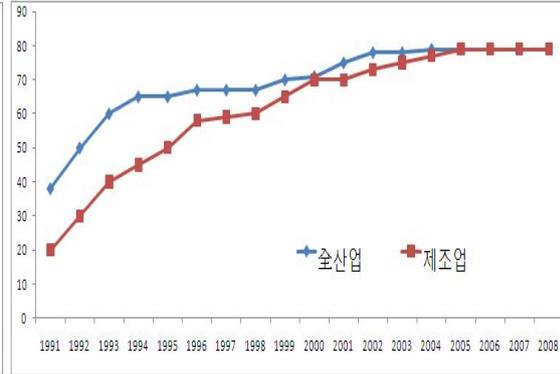
- 통일 직후 구동독 지역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구서독 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8년 현재 서독 지역의 78%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동독 임금 수준(구서독 = 100) >



자료 : Statist isches Bundesamt

< 동독 노동생산성(구서독 = 100) >



자료 : Statist isches Bundesamt

(2) 한계

① 급진적 흡수 통일 방식에 의한 동독 주민들의 소외감

- **원인** :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급진적 흡수 통일은 생활 수준의 불균형 등 동독 주민의 소외로 인한 상황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동독주민들에게 2등 국민이라는 상실감과 패배감을 안겨줌
- 최근 독일에서는 ‘오스탈기(Ostalgie)’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독을 의미하는 오스트(Ost)와 향수를 의미하는 노스탈기(Nostalgie)가 결합된 말로 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를 의미
- 2008년 구 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2,89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 동독 지역 주민들 가운데 자신을 실질적인 독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22%에 불과(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 조사)⁶⁾
 - 동독이 불법국가가 아니었다고 답한 주민들이 41%에 달했으며, 62%는 독일 국민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6%는 동독시절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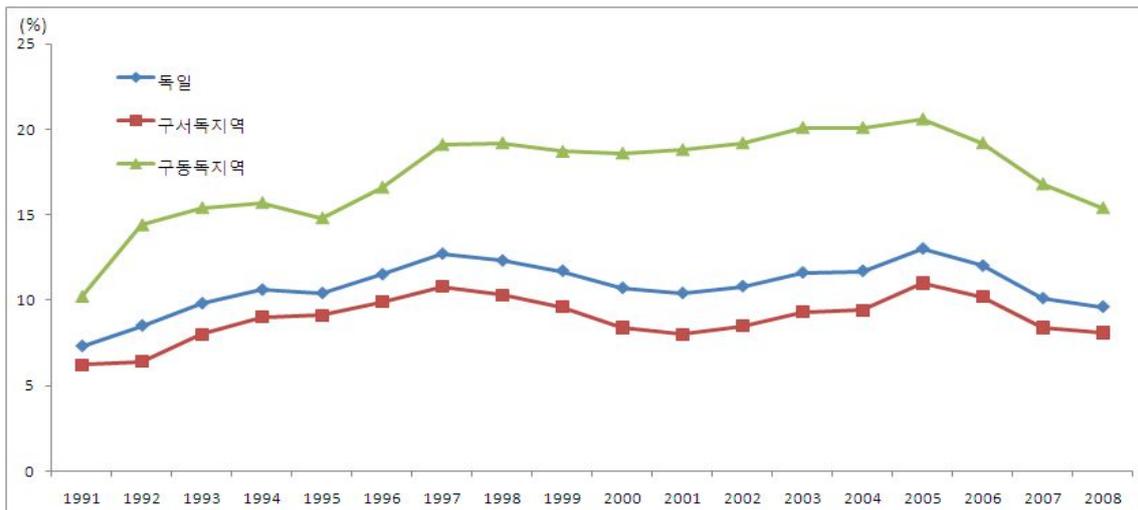
6) 평화문제연구소,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 독일통일 바로알기』, 2009. p. 50 참조.

② 동서독 지역의 불균형 발전

- **원인** : 동독주민들의 대규모 서독 이주 현상에 대한 우려와 총선 등 정치적 이유로 적정교환비율(4.4 : 1)을 무시하고 1 : 1 화폐 통합을 결정)
 - 동독 마르크화의 과도한 평가절상은 동독 상품의 판매·수출 부진과 가격경쟁력 상실에 따른 대량 기업 도산으로 귀결
 - 또한, 신탁청이 사유화 실적에 치중하여 기업가치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없이 구매자 선정을 남발하여 대량 실직 및 기업 도산 속출

- **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 : 동독 노동자들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독 지역 내 급격한 임금 상승을 유발, 대량 실직 사태 초래
 - 통일 이후 서독 지역의 실업률이 6~8%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10~2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2008년 현재까지도 동서 지역간 실업률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실업률 추이 >



자료 : 김영운·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2009. p. 232

7) 박석삼, 『통일 이후의 독일 경제 - 동독 지역 금융개혁 내용과 동서독 경제통합의 문제점』, 한은조사자료 2000-4. 2000.11, p. 36

- 대기업들의 서독 지역 집중 : 급격한 사유화 진행 결과, 구동독 지역에는 자금력이 큰 대기업의 수도 적어 구동독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기업의 부족은 기업 컨설팅이나 신용업, 금융업 등 구동독 지역의 서비스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구동독 지역내 대기업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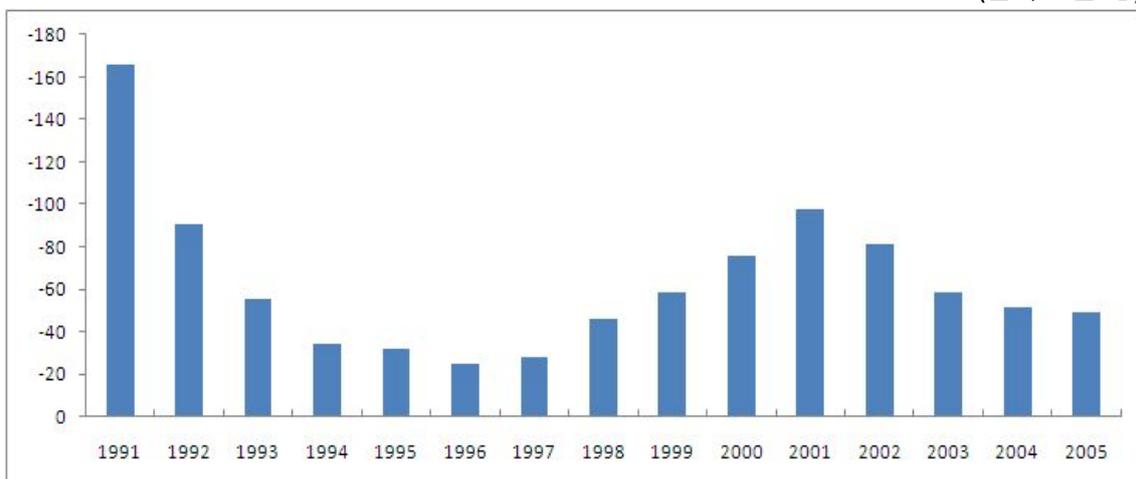
대기업 구분(고용 인원)	동독(1988년)	구동독 지역(2004년)
50,000명 이상	9개	-
30,000~50,000명	18개	-
10,000~30,000명	72개	1개
5,000~10,000명	46개	4개
계	145개	5개

자료 : 국가정보원,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 2009. p. 175

- 동독 지역 인구의 급격한 서독으로의 유출 : 1991~2005년간 서독 지역은 인구가 4% 가량 증가한 반면, 동독 지역은 10% 이상 감소
- 통일 직후 연방정부는 서독의 젊은 세대가 동독으로 이주하여 동독재건은 물론, 동유럽의 체제전환을 활용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동독 지역 재건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경제계획을 수립
-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약 200만 명의 동독 지역 이탈로 인한 인력 손실로 동독 지역의 경제력이 저하되었으며, 이는 다시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이동 촉진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창출

< 국내 이동으로 인한 구동독 지역의 인구 감소 추이 >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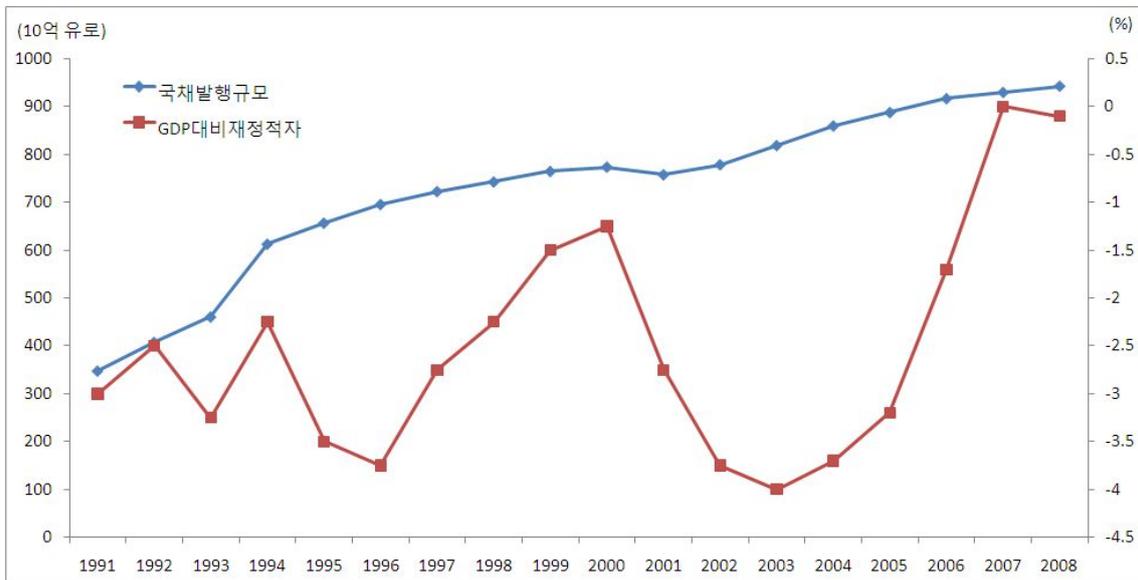


자료 : 국가정보원,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 2009. p. 207

③ 높은 재정 부담 : 국가 재정 부채 누적

- 원인 : 통일 당시 동독 지역 재건 비용을 과소평가하여, 이후 막대한 재건 비용 조달로 세금 인상·재정 적자 확대 등 후유증 지속⁸⁾
 - 통일비용은 독일 정부의 당초 생각(독일 GDP의 1.5%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인 GDP의 4%가 지출
 - 단기간 지나치게 많은 공채를 발행함으로써 금리가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여 오다가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07년 균형재정 달성, 그러나 경기부양책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2009년 이후 정부 재정적자는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⁹⁾

< 독일정부의 공채 규모 변화>



자료 : 황의서, 『독일통일이야기 :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힘의 근원과 통일 후 재정부담』, 야스미디어, 2009. p. 223 참조.

8) 그러나 독일은 통일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은 1990년 21.8%에서 2005년 20.9%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조세부담률을 인상하지 않고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 정부가 통일비용의 3/4을 30년 상환의 장기공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였기 때문임. 황의서, 『독일통일이야기 :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힘의 근원과 통일 후 재정부담』, 야스미디어, 2009. p. 222 참조.

9) EU 집행위는 2009년 -2.9%, 2010년 -4.2%의 GDP 대비 재정 적자 예상.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독일개황』, 2009. pp. 113~114 참조.

- 통일비용의 정의 : 독일에서의 통일비용은 구서독 지역에서 구동독 지역으로 지원되는 공공부문의 이전 금액을 의미¹⁰⁾
- 총통일비용은 구서독 지역에서 구동독 지역으로 이전된 전체금액을 의미
- 순통일비용은 총통일비용에서 구동독 지역에서 연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사회보장기금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

< 독일 연방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른 1991~2003년간 통일비용 내역 >

구분	내용	금액 (10억 유로)	비율(%)	
인프라 재건 지출	도로·철로·수로 개선, 기초단체 교통 개선, 주택 및 도시 건설	160	12.5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구조 및 해안 보존, 투자 보조, 이자 보조, 전철 등 근거리 교통 보조	90	7.0	
사회보장성 지출	연금, 노동시장 보조, 육아 보조, 고등교육 보조	630	49.2	
임의 기부금 지출	독일통일기금	62	295	23
	판매세 보조	83		
	州재정균형조정	66		
	연방보조지급금	85		
기타 지출	인건비 및 국방비 지출	105	8.2	
총 이전지출		1,280	100	
구동독수입(세입 및 사회부과금 수입)		300	23.4	
순 이전지출		980	76.6	

자료 : 국가정보원,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 2009. p. 177

- 독일의 통일비용 : 독일 연방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991~2003년간 총통일비용은 1조 2,800억 유로(약 1,920조원), 순통일비용은 9,800억 유로(약 1,470조원)가 소요
- 이는 연평균 약 985억 유로(약 150조원) 수준으로 서독 GDP의 약 4% 규모
- 독일 통일비용의 경우 사회보장성 지출이 49.2%로 절반 가량 사용되었으며, 인프라 재건 지출이 12.5%, 경제활성화 지원은 7.0%에 그침

10) 김영윤·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2009. pp. 236~238

- 통일비용 조달 : 통일기금, 채무청산기금의 설치 및 연대세와 연대협약, 기타 지원금 등에 의해 총 5,107억 유로(약 770조원)의 기금 조달
- 통일기금의 설치 : 1990년 5월 18일 제1차 국가조약에 따라 1990년 6월 25일 법률에 의해 설치(약 8,280억 유로)
- 채무청산기금의 설치 : 통일조약 제23조에 따라 1990년 7월 1일 독일정부는 채무청산기금이라는 특별재산계정을 설정하여 구동독의 대내외 채무와 화폐통합으로 발생한 은행 및 국영기업의 대차대조표상의 차액을 보전(약 1,390억 유로)
- 연대세에 의한 조달 : 1991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연대추가징수금을 7.5% 부과하였으나, 1993년 폐지되었다가 1995년부터 다시 징수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전 독일에서 통일비용으로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에 5.5%의 '연대추가징수금'을 부과
- 그밖에 1차 연대협약(1995~2004년까지 945억 유로 지원)에 이어 2차 연대협약(2005~2019년까지 1,565억 유로 지원) 프로그램 시행중

< 총 이전지출 >

(단위 : 억 유로)

통일기금(1991~1994)	828
채무청산기금	139
화폐교환보전금	330
신탁청의 적자액	1,050
환경오염처리비용	186
소련 군대 철수 비용 지원금	64
1차 연대협약(1995~2004)	945
2차 연대협약(2005~2019)	1,565
합계	5,107

자료 : 김영운 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2009. p. 238 재구성

4.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사점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편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장기적인 통일 여건 조성이 필요

○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통일에 의한 유무형의 막대한 편익이 창출됨을 인식하고, 통일비용 부담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 경제력 격차 해소가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인식 공유 필요

○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

-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 등 평화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
 -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득을 통해 주변국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 통일의 계기가 되었음

○ 통일 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서독은 실질적 교류·협력 정책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동독 지도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체제 비교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동독 체제의 내부 변화와 통일 여건을 조성
 - 통일 당시 동독이 자체적으로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 조속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과 남한 사회 공감대 형성이 필요
 - **(북한 주민들의 마음 얻기)**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민심 획득 노력과 함께 개성공단과 같은 자본주의 교육의 장을 활성화해야 함
 - 독일의 경제전문가들은 개성공단에 대해 계획경제체제에 자본주의를 알리는 좋은 교육장으로 평가한 바 있음
 - **(남한 사회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충분한 통일 논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과 비용 부담에 따른 경제적 희생에 대한 모순적인 통일 인식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

○ 남북한 균형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통일 이후 북한 주민과의 위화감 해소 및 통일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남북한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

- **(북한 지역 특구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 노력)** 단기간 내에는 새로운 특구 개발보다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개성공단을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 발전
- 특구 운영의 경험 축적을 통해 점차 특구 개발 지역 확대를 통한 외자 유치추진 필요
- **(북한 중화학 공업의 선택적 현대화와 첨단산업 분야의 병행 발전)** 북한 경제가 지속발전가능한 산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철강 및 비철금속 등의 소재 산업과 전기·전자 및 기계, 정유 산업 등의 병행 발전이 필요
- 다만, 이들 기간산업 지역은 별도의 특구로 육성하기보다는 현재의 산업 설비와 지역별 산업 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
- **(북한 SOC 확충을 통한 다양한 발전 구조 모색)** 특히, 단기적으로는 발전 설비의 개보수와 현대화, 연료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동시에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발전 구조의 다양화와 남북한 상생의 녹색성장을 위해 풍력과 태양열 발전소 등 개발

○ 중장기적인 통일비용 재원 마련

- 통일비용은 독일 정부의 당초 생각(독일 GDP의 1.5% 수준)보다 많은 GDP의 4%가 지출되었음을 볼 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재원 조달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최고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을 통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적 차원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 사회적 갈등 완화

- 탈북자들의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에 대비
-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이 통일 이후 소외감으로 인해 구동독에 대한 향수를 갖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북한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완화 대책을 마련

이 해 정 선임연구원 (hjlee@hri.co.kr, 2072-6222)

□ 참고 1. 동독 지역에 대한 주요 지원 프로그램

- 소요된 비용은 창업, 투자지원 및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에 1,228억 유로(약 180조원), 지역발전 지원 프로그램에 총 2,079억 유로(약 310조원) 등 199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총 3,307억 유로(약 500조원) 투자
- 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투자 비용은 연간 174억 유로로 이는 독일의 2008년 GDP 2조 4,923억 유로의 약 0.7%에 해당하는 금액임

< 구동독 지역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누적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건 수	100만 유로	지원건 수	100만 유로	지원건 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창업 투자지원 및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 (ERP /EKH) (1990.3~)	지원 예정액	15,386	3,520	7,539	1,522	2,190	1,216	1,098	1,242	1,537	1,323	6,916	961	478,260	52,045	
	실투자액		8,700		4,179		2,900		2,400		2,323		1,687		122,778	
주거환경 현대화 프로그램 (1990.10~)	지원 예정액 (제1,2차)	53,900	4,880	8,643	1,299	6,792	486	2,890	310	5,706	579	12,280	626	763,215	45,738	
지역발전 지원 프로그램 (1991.1~)	기업경제	지원 예정액	4,549	4,302	3,848	3,336	2,877	1,658	1,910	1,091	2,309	1,169	2,229	1,212	68,364	35,759
		실투자액		10,016		7,339		7,957		5,481		6,390		6,957		175,969
	경제관련인프라	지원 예정액	896	4,007	424	1,235	468	556	362	517	241	332	342	640	13,507	21,635
		실투자액		3,064		938		682		711		403		845		31,92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9 독일통일백서』, 2009. p. 210

□ 참고 2. 통일 이전 서독의 동독 지원 규모

○ 통일 이전 서독의 동독 지원액은 1971~1989년까지 연평균 약 2조원에 달함

- 이는 통일전 서독 GDP의 2.2%에 달하는 금액이었음

< 통일 이전 서독의 동독 지원액(1971~1989) >

	주체	지원내용	금액
지원	서독민간인 → 동독민간친지	소포 우편물	450억 마르크
		여행지참물	50억 마르크
		면세특별판매소	26억 마르크
		현금증여	100억 마르크
		계	626억 마르크
	서독교회 → 동독교회	물자원조	25억 마르크
		면세특별판매소	3억 마르크
		교회사업 물자지원	28억 마르크
	계	56억 마르크	
	서독 연방정부 → 동독주민	환영금 지급	20억 마르크
		서독방문 동독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5억 마르크
계		25억 마르크	
계	계	707억 마르크	
지불금	서독민간인 → 동독정부	도로사용료	10억 마르크
		입국비자 발급 요금	7억 마르크
		조세조정금	2억 마르크
		기타 공과금	2억 마르크
		강제 환전금	45억 마르크
		계	66억 마르크
	서독정부 → 동독정부	통과여행 일괄지불금	78억 마르크
		도로사용 일괄지불금	5억 마르크
		허가수수료	3억 마르크
		교통시설투자비	24억 마르크
		정치범 석방대가	34억 마르크
계	144억 마르크		
계	계	210억 마르크	
총계			917억 마르크 (약 380억 달러, 연평균 20억 달러)

주 : 미 달러화 평가금액은 1971~1989년 기간의 평균환율(1달러=2.39595DM)에 기초
 자료 : 박광작, 「독일통일 사례로 본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합의 전망 및 과제」, 『베를린장
 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 쟁점과 과제』,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전전략연구소
 세미나, 2009. 11. p. 137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0.0	-4.0	-6.8	-2.6	-4.9	-0.7	1.6	5.0	3.3	3.7	1.5
유로 지역	0.6	-0.4	-1.9	-4.1	-2.5	-0.1	0.4	0.0	1.0	0.2	1.0
일본	-1.2	-5.4	-10.0	-5.2	-16.6	10.4	-1.0	-4.1	2.4	4.4	0.4
중국	9.6	9.0	6.8	8.7	6.2	7.9	9.1	10.7	10.5	11.9	10.3
한국	2.3	3.1	-3.4	0.2	-4.3	-2.2	1.0	6.0	5.3	8.1	7.2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9월10일	9월1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2.79	2.76	-0.03p
	엔/달러	90.76	96.65	92.93	84.28	85.84	1.56¥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2716	1.3076	0.036\$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0,463	10,595	132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239	9,510	27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40	3.45	0.05%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65.7	1,160.5	-5.2원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802.6	1,827.4	24.8p

주: 9월 17일 해외지표는 전일(9월 16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9월10일	9월1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6.45	74.59	-1.86\$
	Dubai	36.45	71.85	78.06	-	76.25	-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5.14	278.69	3.5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